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잔액 133조 증권사 연체율 1.4%p 증가한 17%

금융위, PF 정상화 상황 점검회의 전체 연체율 2.17%, 0.16%p ↑ “증권사 연체율, 관리 가능한 수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잔액이 133조 원에 달하는 가운데 특히 증권사들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17%를 넘어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기재부·국토부·한국은행·금융지주·정책금융기관과 함께 ‘부동산 PF 사업정상화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근 부동산 PF 시장의 상황 점검을 비롯해 부동산 PF 사업정상화 프로그램 추진상황, 부동산 PF 사업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대주단, 시행사, 시공사 등 시장 참여주체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금융권의 부동산 P

F 대출잔액은 133조 1000억 원 규모다. 연체율은 2.17%로 3월 말 대비 0.16%p 포인트(p) 상승했다. 연체율은 작년 말 1.19%에서 지난 3월 말 2.01%, 6월 말 2.17%로 상승세는 이어졌지만 상승폭은 둔화되는 추세다.

다만 업권별로 보면 격차가 크다.

증권사들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17.28%로 3월 말 대비 1.4%p 높아졌다. 지난 2021년 말 3.71%에서 2022년 말 10.38%로 큰 폭으로 뛰었고, 상승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금융위는 “증권사의 연체율이 높아졌지만 상승폭은 1분기 대비 2분기에 크게 둔화됐다”며 “연체대출 규모는 9000억 원으로 증권사 자기자본 대비 1.2%에 불과해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PF 대주단 협약은 지난 8월 말 기준 총 187개 사업장에 적용 중이다. 이 가운데 152개 사업장에서 기한이익 부활, 신규자금 지원, 이자유예, 만기연

장이 이뤄졌다. 사업성이 없거나, 시행·시공사와 대주단 간의 공동 손실분담이 부족한 사업장은 공동관리 부결(23개) 및 경·공매 등을 통한 사업장 정리가 진행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84개(경기 44개, 서울 24개, 인천 16개), 지방 103개에 협약이 적용됐다. 용도별로는 주거시설(114개) 뿐만 아니라 상업시설, 산업시설, 업무시설, 기타시설, 숙박시설 등 다양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부동산 PF 사업장의 재구조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와 이를 전제로 한 신규 자금 투입이 현재 부동산 PF 시장의 정상화와 원활한 주택공급에 핵심적인 부분”이라며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방안을 관계부처·기관 및 금융업권과 긴밀히 협의해 이달 말 정부합동 주택공급 확대 관련 대책에 포함하여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수출 부진’ 국내기업 매출액 4.3% 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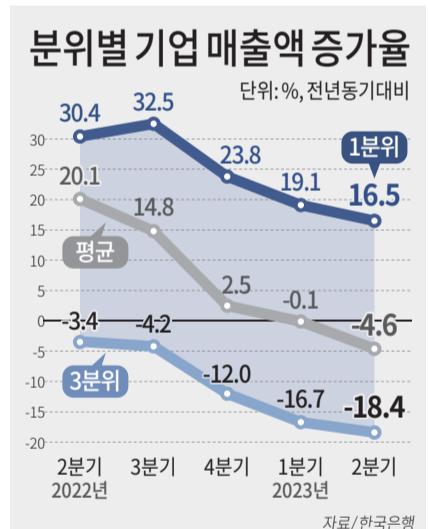
한은, 2분기 기업경영 분석 제조업, 석유화학·기계 중심 6.9% ↓ 매출액 영업이익률 3.5%p 떨어져

2분기(4~6월) 기업들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성장세가 둔화하며 수출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특히 IT 경기 회복이 더뎌지며 반도체 수출액 또한 줄어든 영향이다.

12일 한국은행이 국내 주요기업 실적을 분석한 ‘2분기 기업경영 분석’에 따르면 이들 기업의 매출액증가율은 1년전과 비교해 4.3%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매출액 증가율은 기업의 성장성을 나타내는 지표다.

제조업은 석유화학(-17.1%)과 기계·전기전자업(-15.4%)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6.9% 하락했다. 글로벌 성장세가 둔화하며, 수출이 감소했다.

비제조업은 같은기간 전기기기업(19.8%→10%)과 운수업(-5.9%→-



14.8%)을 중심으로 매출액이 0.7% 줄었다.

이성환 경제통계국 기업통계팀장은 “운수업은 상하이컨테이너 운임지수가 하락하며 운수업 매출도 감소했다”고 말했다.

판매가격이 하락하며, 기업의 수익성도 나빠졌다. 기업의 매출액영업이

익률은 2분기 3.6%로 1년 전(7.1%)과 비교해 3.5%포인트 하락했다.

제조업은 기계·전기전자업(12.1%→2.9%)을 중심으로 감소했다. 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재고자산 평가손실이 발생한 영향이다.

비제조업은 운수업과 건설업의 영향으로 하락했다.

이 팀장은 “일부업체의 건설현장 붕괴, 재시공으로 대규모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추가로 부실등이 많이 이뤄지면서 총당금을 쌓는 부분에서 영업이익률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기업의 안정성 지표는 소폭 하락했다. 기업의 2분기 부채비율은 90.8%로 1년전(91.2%)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 팀장은 “12월 결산법인은 미지급 배당금을 (장부상) 부채로 잡아놓기 때문에, 2분기 배당금이 지급되면서 부채비율이 소폭 하락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IMF “中 성장 둔화땐 韓, 추가 하방압력”

» 1면 ‘내년에도 1%대’서 계속

기획재정부(2.4%)와 한국은행(2.2%)도 전망치가 2.5% 미만이다. 국제기구 중에선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G)이 2.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1% 등이다.

한은의 경우 지난달 24일 내년 전망을 기준 2.2%에서 0.1%p 낮췄다. 한은은 또 중국의 부동산시장 침체가 지속될 시 우리나라 GDP성장이 1.9~2.0%를 기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대외변수에 따라

1% 후반에 그칠 수 있다는 얘기다.

한은은 올해 2월 전망치 2.4%에서 5월(2.3%)과 8월(2.2%) 등으로 2분기·3분기에 각각 한 차례씩 내려 잡았다.

IMF도 이달 6일 기재부와의 연례협의 결과를 공개하며 “중국 경제 성장이 둔화할 경우 2024년 한국에 추가적인 경기 하방압력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IMF는 중장기 성장전략을 위해 저출산·고령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우리 정부에 조언했다. 협의단의 헤럴드 핑거 IMF 한국미션단장은 “구조개혁 노



부산 남구 신선대(아래) 및 감만(위) 부두 약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뉴스

력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성장률의 경우, 씨티그룹 등 주요 8개 IB의 전망치 평균은 1.1%에 그친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12일 서울 서초구 세빛섬 플로팅아일랜드에서 열린 서울관광 재도약 결의대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관광 미래비전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

“다시 찾고 싶은 고품격 매력도시로” 서울시 ‘3·3·7·7 관광시대’ 온다

서울관광 미래비전 선포식

서울시가 ‘더 오래 머무르고 다시 찾고 싶은 고품격 매력도시’로 거듭나고자 관광 인프라와 서비스를 개선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세빛섬에서 진행된 ‘서울관광 미래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서울관광 10가지 핵심과제’를 선언했다. 이를 통해 시는 ▲‘3000만’ 관광객 ▲1인당 지출액 ‘300만원’ ▲체류기간 ‘7일’ ▲재방문율 ‘70%’를 의미하는 ‘3·3·7·7 관광시대’를 연다는 목표다.

고, 야간까지 이어지는 관광 수요 창출에 팔을 걷는다. 여의도 150m 상공에서 서울 야경을 즐기는 계류식 가스 기구 ‘서울의 달’을 비롯해 한강 교량, 청계천에 애경과 일몰 명소를 만들고 ‘한강 드론라이트 쇼’를 상시 개최한다.

대규모 관광 인프라에는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대관람차, 노들 글로벌 예술섬 같은 랜드마크로 관광객을 유인하고 한류·마이스·스포츠 등 고부가 가치 관광산업의 성장 기반 시설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숙박 시설도 늘린다. 단기적으로는 유휴시설을 활용해 숙박 수요에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용적률 인센티브로 관광숙박시설 신·증축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벤트성 팝업 호텔, 한강 수상 호텔 등 다양한 형태의 숙박시설을 도입한다.

내년부터 동남아(태국·말레이시아·베트남) 시장에 관광 사무소를 두고 현지 밀착 마케팅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시장을 개척한다. 2025~2026년을 서울방문의 해로 지정하고 민관이 협력해 관광객 유치에 역량을 집중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관광객이 도시에 감동을 느끼고 다시 찾아오게 만드는 것은 대규모 인프라가 아니라 관광 현장의 진심 어린 서비스”라며 “이번 미래비전 선포를 계기로 시와 업계가 뜻을 모아 서울관광의 품질, 매력을 획기적으로 높인다면 ‘서울’은 머지 않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

“제재 다를 경우 차별 등 논란의 소지”

» 1면 ‘마비된 내부통제 시스템’서 계속

‘상당한 주의’ 정도를 금융당국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 제재할 수 있을지를 의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돼 지켜봐야 알겠지만 발생 경위와 정도, 결과가 금융회사마다 다를 텐데, 누구나 납득이 갈만한 기준을 마련해 제재하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금융당국에서는 정당하게 처벌했다고 하지만, 제재가 다를 경우 차별논란, 손방망이 처벌, 차별논란 등 다양한 논란을 부를 소지가 있다”고 했다.

임원이 상당한 주의를 했지만, 직원이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 제재 여부도 논란이다. 상당한 주의를 했다는 이유로 임원의 제재를 면제하면, 직원을 통해 비슷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반면 직원의 책임을 임원까지 물으면 잘못된 생각을 가진 직원 1~2명 때문에 임원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이밖에도 금융사고 발생시 금융위에 상당한 주의를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절차 역시 형식적인 절차만 키우고, 금융당국의 영향력만 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사 내부통제와 관련해 당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금융사에 대한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